

## “안전한 식품”의 신화와 현실:

### GM 콩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 문목표\*

#### 1. 머리말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 지구화(glob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과정은 단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과 유통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일상적인 음식만 보더라도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 간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선이나 나물, 북한산 호두, 버섯,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비스킷 등 가히 지구화의 전시장이라 할만하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식량 자급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식량 수입국인 만큼 오늘날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7~8할 가까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아야

---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인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식품체계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경계를 넘은 전 지구적 유통 현상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다(Busch 2004: 165~170). 첫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지역주민들이 소비하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되며, 운반되어 자신의 식탁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는 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론 식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연결고리들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대규모로 산업화된 식품의 생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식품교환의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전문화된 식품체계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간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구입하며, 생산, 가공 및 유통의 과정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혹은 개입할 수 없는 단순한 소비자로서 남을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생산과정의 산업화로 인하여 새로운 종류의 위험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등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제초제, 살충제, 농약 등에 의한 인체위해성의 문제는 물론 육용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의 집이나 이웃에서 키우던 닭이나 소, 돼지를 도축하여 소비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대규모의 산업화된 사육장에서 다양한 인위적 방법을 가하여 기르고 도축한 동물들의 고기를 소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질병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혹은 도축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떠한 약품이나 사료들이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식품 유통체계의 지구화로 인하여 그러한 위험은 더

이상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벨기에산 닭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의 문제, 영국산이나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보다 최근의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우려 등은 그러한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위험과 안전성의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식품의 가공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식품안전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장기간의 보존과 장거리 유통을 위하여 통조림, 냉동 등 다양한 가공법이 발달하며 이 과정에서 부패를 지연시키고, 음식물의 색이나 맛, 영양가치 등을 유지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방부제, 식품첨가제들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식용유, 과일 주스, 간장, 각종 소스 등의 가공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어떠한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안전성 및 위험의 문제도 증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가물, 향료, 화학조미료 등을 사용하는 간식용 식품, 과자류 등 가공식품의 확대나 패스트푸드의 증가 등도 새로운 위험의 요인을 제공한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식품체계의 산업화 및 전지구화 과정은 인간과 음식물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종래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작동하던 식품의 공급과 판매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종류의 식품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식품 안전의 문제는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아 신선도를 판단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끊임없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확대, 검사를 실시할 권위를 가진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의 증가, 국제적인 협약 등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특정의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구매 행동은 무엇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가? 이 글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 식품의 하나였던 콩의 소비를 둘러싸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콩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그것이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식품체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콩은 두부, 콩나물, 된장, 간장 등 일상적인 음식의 기본을 구성하는 식품 품목의 원료로서 쌀과 함께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홍병희 1991; 李敬遠 1984; 권신한 1985; 李盛雨 2000). 또한 보다 최근에는 근대 영양학에 의해 그 가치가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성인병 등 근대적 질병을 예방하는 웰빙 음식으로, 건강식으로 부각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콩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국내의 콩 수급현황의 변화로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유전자변형 혹은 재조합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로 생산된 미국산 콩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었다.<sup>1)</sup> 즉 콩이 아주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우리 식품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이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콩의 대부분이 수입 콩이며, 최대의 수출국은 유전자 변형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유통하고 있는 미국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은 유전자변형 콩의 품종이 개발되거나 재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콩에 대한 고찰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관념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소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의 저항 내지 반응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세 번째로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인 콩이 한국, 중국, 일본의 음식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논의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

1) 국내에서는 기관에 따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유전자변형작물”(농림수산부) 혹은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전자 조작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다. 또한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지칭된다.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콩에 대한 고찰에 관심을 갖게 된 한 이유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와 달리 전반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자 해 왔으며,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온 편이었다.<sup>2)</sup> 즉 중국의 경우 GMO에 대한 반응은 자국 농민의 보호 및 농업 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차원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항하는 소비자 운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3)</sup>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 GMO에 대한 반응은 주로 인체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둘러싼 소비자 보호 운동의 차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저항이 정부의 부처 및 기업들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Whitelaw 2004).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GMO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광범위한 공론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일부 시민운동, 환경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는 비단 한국, 중국, 일본 뿐 아니라 GMO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혹은 미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주요 GM 작물 생산국인 브라질 등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차이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 
- 2)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최근 들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에 제동을 걸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 GMO 운동을 고려할 때 중국이 GMO 농산물의 개척자로 외부에 비쳐질 경우 그러한 지역으로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나타난 변화일 뿐 GMO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Paarberg 2000; New York Times Oct. 22. 2002).
- 3)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시민운동의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 영향도 미미한 사회주의 중국에서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인 대만에서도 관찰된다(Guo Yuhua 2004; Kim Kwang-ok 2004 참조).

식품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과정 및 그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담론의 생산주체로는 GMO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기업이나 수출국들 뿐 아니라 그것의 위해성을 강조하고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단체들, 유통과정을 규제하거나 인가하는 국가의 기관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언론매체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뒤에서도 다시 논의되겠지만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현 단계의 논의는 찬성/옹호하는 측이던 반대/저항하는 측이던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상의 현실”(virtual reality)을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의 개념은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기초하여 있으며 식품 자체에 내재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협상되고 타협된 결과로 구성되며 따라서 영구적인 것이기 보다는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GM콩을 둘러싼 안전성 담론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문헌자료 이외에 인터넷 자료와 언론 보도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또한 소수의 소비자 인터뷰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일반의 도시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소비자 의식의 형성이나 구매행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자료 또한 뒤에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 작물과 같이 아직 국내에서 그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의 반응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며 참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몇 개의 심층면담은 계층이나 지역 등 모든 변수를 망라하여 콩소비행위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 특징을 기술하기 위한 통계적 의미를 갖는 자료로서 보다는 유전자변형 기술에 의해 생산된 수입 콩의 소비자 혹은 비(非)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몇 개의 예를 들어 제시해 보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임을 밝힌다.

## 2. 유전자변형 작물(GMO)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

### 1) 콩의 수입·수출 현황과 유전자 변형 콩

콩의 식품영양학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새로운 가공식품이 발달하며, 또한 콩기름, 두유, 탈지대두박 및 사료용 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의 양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수입 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내의 콩 생산은 1970년대 중반 약 30만 톤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 자급률이 연간 콩 수요량의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국내 콩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과채류의 재배를 위하여 밭을 전용(專用)하기 때문이며, 또한 국내에서 재배되는 콩의 육종 자체가 대규모 증산이 어려운 종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김길환 1984: 17).

반면 콩의 수입량은 1978년경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83년에 658,000톤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51만3천 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여 2005년도에는 133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수입되는 콩의 80%정도가 유전자재조합 콩이며, 그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고 그 이외에 브라질, 중국, 캐나다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표 1) 국가별 · 연도별 콩 수입량

(단위: 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국					
미국	1,238,814	1,167,086	1,186,645	1,012,650	794,322
브라질	103,472	193,020	249,433	229,233	447,692
중국	48,130	56,040	55,218	65,696	87,475
캐나다	170	59	-	1,819	560
아르헨티나	-	-	19,400	-	-
기타	6,224	1,930	2,563	2,151	491
합계	1,396,810	1,418,135	1,513,259	1,311,549	1,330,540

자료출처: 『2006 바이오안전성 백서』, 88쪽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작물의 표시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2001년도 이전 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콩이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고, 브라질,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주목된다(위의 <표 1> 참조). 이 중 브라질은 미국과 같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콩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비유전자조합 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2)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안전성 논란: 초기 단계

콩은 한국인에게 전통적으로나 현대적 관심사에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품이다. 그러한 의미는 ‘일상성’과 ‘전통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콩은 두부나 콩나물과 같이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콩은 된장, 간장 등과 같이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현대의 (민족)정체성 담론, 노스탈자 담론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콩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학적 요소가 현대 과학에 의해 새롭게 입증됨으로써 콩은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현대문명의 대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모든 현대적 성인병들이 우리가 육류 중심의 서



구식 식단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라면 이제 다시 청국장이나 두부, 콩국수 등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건강식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통하여 현대 문명이 가져 온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sup>4)</sup> 그리고 “우리 콩, 우리 맛, 우리 건강”을 내세우는 많은 선전 문구에서처럼 이때 우리가 먹어야 할 콩은 우리의 땅에서 생산된 우리의 콩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먹는 콩은 안전한가?”하는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쟁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콩의 자급률이 감소하고 수입 콩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말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콩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언론매체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유전자변형작물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진행된 콩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곧 유전자변형 작물,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일치한다. 그것은 국내로 유입되는 콩이 거의 100%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미국이 바로 유전자변형 콩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을 뿐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가 주류 언론 등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90년대 말부터로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기의 보도는 주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깨우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 이미 유전자변형작물의 표시제가 실시된 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콩의 경우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형품종이 생산·유통되고 있는 옥수수 등과 달리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

4) 최근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수많은 콩 요리 전문음식점, 콩 관련제품 생산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들의 소개말이나 선전은 그러한 논리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한 기업이나 업체들이 관계되는 만큼 여기서 일일이 그러한 사이트들의 주소를 제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작물은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RRS 즉 Round-up Ready Soybeans 단일품종인 것이 특색이다. 이 품종은 1996년부터 미국 국내에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아르헨티나, 호주, 멕시코 등으로 판매되어 재배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지이며 EU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GMO 콩과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 하에 있던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는 표시제의 시행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주요한 무역 분쟁의 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GMO labeling)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서도 여러 시민단체, 환경운동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GM 작물이 유통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표시제를 도입하고자 계속 노력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Korea Herald 1999. 7. 6; News Naver, 1999. 11. 28).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채택되는 특성의 규제가 다른 회원국의 교역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그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해당 회원국에 그러한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농수산부는 이미 1999년 3월 WTO에 그러한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미국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대 표명으로 실시를 미룰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미국정부가 GMO의 표시를 반대해 온 명분은 만일 유전자 변형 작물과 그 가공제품을 모두 밝혀 표시하고자 하면 이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미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국내 유통의 경우는 물론 수출 시에도 GMO 작물과 non-GMO 작물의 분리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비유전자 변형 콩만을 분리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이는 소비자의 부

답으로 돌아가며 결과적으로 non-GMO 작물 및 그 가공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한국의 농림부에서도 non-GM 콩 만을 생산단계에서부터 구분하여 유통할 경우 미국산 수입콩의 가격이 현재보다 30~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5)</sup>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유전자변형 작물을 세계적으로 유통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 이외에도 수입 작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저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국내가공업자들로부터의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와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우는 반생명공학 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시민운동 세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력 속에서 결국 일본과 유사한 시기인 2001년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언론의 보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9년 소비자 보호원에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에 유전자 변형 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발표는 “충격적인 뉴스”로 국내의 거의 모든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한겨레 1999. 11. 4. “시판두부 82% 유전자변형 콩 섞여 있다”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직후 전체 두부제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8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소위 “두부파동”으로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표시제의 도입을 향한 하나의 압력으로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표시제가 시행된 2001년 3월 1일부터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콩, 옥수수, 콩나물의 3품목뿐이었으며(2002년 3월부터 감

---

5) 당시의 시가로 국내에서 GM 콩이 섞여 있는 미국산 수입 콩은 톤당 700원 선인데 비해 국산 콩은 2천~3천 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한다(News Naver 1999. 11. 9). 또 다른 자료는 Non-GM 콩은 kg당 730원이며 GMO 콩은 660원이라 한다(“콩의 수입과 유통” <http://www.podo.biz>). 이러한 가격차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콩기름, 두부 등 콩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은 가격의 유지와 이윤 확대를 위해 대부분 수입 콩에 의존하고 있다.

자가 추가됨),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혼입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표시를 면제하거나 심지어 ‘유전자 변형 콩(옥수수)이 아님’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어 2001년 7월부터는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등 GM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 중에서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27개의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별도로 검토하여 표시제가 시행되었다.<sup>6)</sup> 그러나 식용유 등과 같이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의 DNA가 남아 있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원료로 사용했다라도 표시를 면제 하였다. 또한 식용이 아닌 사료용에 대해서는 표시를 면제하였으며, GM 농산물을 사료로 먹인 축산물로부터 얻은 육류, 달걀제품 등도 역시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News Naver, 1999. 11. 28.).

반GMO 운동단체들은 2001년도 정부의 표시제 시행을 일단 하나의 성과로 받아 들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언론 및 자체 홍보자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한국 정부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표시 대상 품목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소비자들이 여전히 GMO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경우 식용유 제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쓰이는 콩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까지 표시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3%까지 허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은 까닭에(일본의 경우는 5%임) 유럽의 기준과 동일한 0.9%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안전성과 직결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표시제를 확대한다면 이로 인한 득보다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한 실이 더 많을

---

6) 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6월말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GMO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라 한다(세계일보 2007. 3. 29, 동아일보 2007. 3. 29, 경향신문 2007. 3. 29 등).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 3) 과학에서 정치·경제·문화 담론으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MO와 관련된 논란이 상대적이고 진행형일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 과학에서 그것의 안전성 혹은 위해성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sup>7)</sup> 즉 정부에서 GMO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운동단체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일차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해를 끼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해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옹호론자들 측에서는 바로 똑 같은 이유, 다시 말해 GMO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GMO를 별도로 취급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위원회는 미국 등 3개국이 지난 2003년 제소한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재배 및 유통금지조치에 대해 2006년 11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은 가리지 않은 채 수입금지가 과도하게 연장됐다는 취지에서 제소국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국내의 반GMO 단체들은 이러한 WTO의 결정이 앞으로 GMO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문화일보 2006. 2. 9; 한겨레 2006. 11. 25; 서울신문 2007. 4. 6).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과학적인 영역에서 곧바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담론으로 확대되

---

7) GMO의 위해성과 관련된 인과관계나 안전성이 명백하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올리히 벡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대 과학기술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인지도 모른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순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과학이 문제해결의 원천이기 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 한다(Beck 1992:155).

8) GMO에 대한 반대론과 옹호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허남혁(2000), 권영근(2000) 박민선(2001) 등을 참조할 것.

어 가는 경향을 보이며(Heller 2004), 특히 한국의 경우는 GMO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의제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유전자 변형식품의 해악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의 주된 생산 주체인 국내의 시민·환경 단체들이 가장 강조하는 측면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치는가의 문제이기 보다는 농업 생산 및 유통의 세계화 과정에 수반되는 중심국과 주변국의 종속관계의 심화 및 환경오염을 둘러싼 다국적 기업 횡포의 가능성 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식품을 반대해 온 국내의 한 단체가 펴낸 자료집의 서문은 다음의 구절로 시작된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태동하게 된 WTO 체제를 토대로 ‘자유무역,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WTO체제는 생명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체제이므로 WTO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비 생명화, 즉 생명파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MO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확인·보장되지도 않은 채 다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배되어 전 세계에 수출·전파됨으로써, 인체와 농업 및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2000: 5).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GMO 반대론의 대표적인 정치경제적 의제의 하나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즉 GMO의 개발은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에 의한 농업 및 식량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종자산업의 세계 제 2위이자 농화학 산업의 세계 3위인 몬산토(Monsanto)사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 우리나라에는 ‘근사미’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다)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라운드업 레디(Roundup-Ready)’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제초제와 한 세트의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뿌려야만 싹이 트도록 하는 ‘트레이터 기술’ 등을 개발하여 종자시장의 독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종자시장의 70%가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합작의 형태를 통해 이미 국내에도 진출해 있으며,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종자(種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의 근간이며,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와 함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유전자조작 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2000: 34). 따라서 식량과 농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을 막고 나아가 우리의 농산물을 지켜내고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GMO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과 대립되는 생명공학 및 GMO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로 생명공학 산업계 및 관련 학계와 이들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각 부처들로 구성되는 이러한 옹호론자들은 생명공학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이윤을 강조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은 무시하는 입장을 취한다(허남혁 2000: 61~72). 즉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21세기 식량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며, GMO는 반대론자들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환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에게 생명공학 기술은 육종(育種)이나 발효기술 같은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 생물기술과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윤리적·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국가경쟁력의 담론을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즉 21세기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의 육성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고 따라서 전사회적으로 GMO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생명공학을 육성한다

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우리가 또다시 뒤 처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담론이다.

또한 GMO의 옹호론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운동, 생명운동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자본의 이윤추구로부터 국민의 건강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윤리적 명분을 내세우나 반면 “유기농이나 자연적 농법에 의한 농축수산물도 돈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뿐이며, 따라서 자연산(自然産)만 찾다 보면 수많은 인류가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연만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원시적 자연주의의 귀족그룹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조승현 2002: 10).

GMO 관련 국내의 언론 보도는 대체로 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학적 안전성의 검증보다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슈로서 GMO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유럽 GMO 무역전쟁”(경향신문 2003. 5. 1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GM 식품 식탁에 널렸는데 美 눈치보며 비준 차일 피일”(한국일보 2003. 6. 30)

“中, 콩수입중단 무역마찰 조짐 — GMO 안전규정 들어 美, 브라질산 반입 중지”(경향신문 2003. 8. 15)

“‘식품안전성’ 보호무역 새 무기로”(서울신문 2004. 12. 17)

“유전자조작식품(GMO) 논란 재점화”(내일신문 2005. 7. 6)

“다시 불붙는 ‘유전자변형식품’ 논쟁/WTO ‘유럽GMO규제’ 철회 요구할 듯”(문화일보 2006. 2. 9)

“식탁 위의 세계대전/‘재앙적 질병’ 농산물 싸고 무역분쟁”(한겨레 2006. 11. 25)



“농어촌을 살리자/유전형질 변화 농작물 재배면적 급증”(세계일보 2007. 2. 22)

“미, LMO에 목매는 까닭/표시제 없애고 국제규제 강화 허물기”(한겨레 2007. 4. 7)

또한 보다 최근에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간지들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과 섬유 수출을 연계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였다.

“FTA 협상단 문건 ‘LMO-섬유 연계’ 드러나 /‘식탁주권’ 흔들는 테이블 밑 거래”(한겨레 2007. 4. 7.)

“한·미 FTA 시대/유전자 변형 유기체’ 위해성 심사 안 받아도 되나”(서울신문 2007. 4. 6.)

“KORUS FTA 시대/미국산 LMO 수입되나 … ‘검사생략’ 의혹”; (국민일보 2007. 4. 6.)

위에 열거된 신문기사 제목의 예들은 무역분쟁, 식량주권, 우리농산물 보호 등의 정치적·경제적 의제에 초점을 맞춘 GMO 관련 국내 언론보도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 4) 안전성 담론과 국가주의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생명공학 내지 유전자조작기술을 찬성/지원하거나 그에 대해 반대/저항하는 입장이 항상 국민건강, 소비자 보호, 혹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만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많은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나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책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미국산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며 또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많은 경우 자국의 생명공학기술에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세계 식량농업 시장에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모순은 국내의 안전성 담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미국산 GMO의 유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GMO가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해 왔던 국내의 언론들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관련 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 전반에 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은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소위 황우석 파동 당시의 국내 언론 보도 태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유전자변형 기술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GM 작물에 대한 보도는 다음의 예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선진기술’이나 ‘과학입국’ 등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4종 3년내 보급”(서울신문 2005. 6. 13)

“과학입국 그린 프로젝트 … ‘파란 장미’ 꽃피운 인간의 기적”(국민일보 2004. 7. 21)

안전성 담론에 보이는 이러한 모순은 유전자변형 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GMO이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것이 미국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개발된 GMO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런 점에서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이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작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성 승인조처에 대한 비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1999년 8월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해 온 한국의 정부기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0년 6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콩인 ‘라운드업 레디 소이빈’에 대해 ‘인체안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2002년 9월에도 역시 몬산토의 GMO 옥수수 ‘Mon 810’과 ‘라운드업 레디콘 GA21’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2002년 9월 23일, 서울 =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위의 결정이 우리의 자체적인 검사나 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GM 작물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몬산토사가 제출한 안전성 검증 서류에만 기초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즉 국내의 소비자 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건강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앞장서 그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은 우리 스스로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그동안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GMO를 판별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 검증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졌었다. 즉 GMO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GMO 확인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것도 몇 %가 들어갔는지를 판별해내는 능력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부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기존의 모든 GMO 관련 식품을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업적으로 ... 양산되는 기적이 일어나 국내의 식품회사들이 GMO 관련 안전 실험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 미국의 GMO 공세에 맞서 뒤쳐진 GMO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철저한 지원과 과학계의 연구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도 GMO를 알고 대처하고 이용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될 것으로 믿어진다**(국제환경뉴스 <http://ienews.net/dadam/8-gmo.html> 필자 강조).

다음의 보도는 유전자변형 작물 논의에서 다른 무엇보다 국익(國益)이 우선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농산물이나 가공품목의 국제유통을 대폭 확대하려는 미국과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는 유럽의 입장이 맞서 있는 가운데 최근

한·중·일 3개국이 공조해 양측 주장을 모두 무력화 시켰다. … GMO가 극소량 섞여 있어도 이를 GMO로 분류되도록 해 사실상의 국제 유통을 막으려는 유럽안이 최종규격화의 단계에서 폐지됐으며, 반대로 GMO가 다량 섞여 있어도 일반농산물로 분류하지는 미국 측 안도 부결됐다고 기술표준원은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유럽안이 채택됐을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GMO 표시방법이나 시험시설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분쟁 발생시 불리한 처지에 놓일 뻔 했다”며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중일, GMO 美·유럽안 저지”, 국민일보 2004. 3. 5).

이 예는 GMO를 둘러싼 논쟁이 과학이나 윤리, 혹은 이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이며, 나아가 GMO의 안전성 개념은 상대적일 뿐 아니라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 협상되고 타협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 3.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sup>9)</sup> 다만 여기서는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이는 반응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해 보는데 그치고자 한다.

앞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콩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일상적이고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친근한 음식이었다. 또한 식생활의 서양화와 육류소비의 증가 등에서 오는 성인병에 대한 공포의 확산,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음식의 양보다는 맛과 질을 더 고려하게 되는 경향,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현대

9)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언론 보도들을 통하여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2000; 김배성 2002; 김명선 외 2003; 김은진 2004; 박희제 2004 등 참조)

인들에게도 각별히 선호되는 바람직하고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전과 달리 오늘날 국내에 공급되는 콩은 대부분이 수입산이며, 그것도 유전자 변형 콩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음식으로서의 콩의 소비 및 선택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다양한 담론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한편에서는 콩이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며 재래식 된장을 비롯하여 우리의 전통 식품 중에서 새로이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를 풍부히 간직하고 있는 우월한 음식이라는 전통주의 담론, 민족정체성 담론, 근대적 건강담론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수입된 외국산 농산물은 안전하지 않으며,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즉 다국적 농업기업들에 의해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들은 인체와 자연환경에 유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농민운동, 반생명공학운동, 반세계화운동 단체들이 생성하는 담론들이 끊임없이 각종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입장들의 외중에서 국내의 언론들은 수입산 GMO에 대해 보도할 때는 그것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이나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입산 GMO에 대해서는 “느슨한 규제”, “미국의 압력에 굴복” 등을 강조하여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일본, 중국 등과 힘을 합쳐 GMO에 대한 유럽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국제규격화 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국익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내 소비자 단체, 환경운동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 및 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수입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고려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막연한 위해가능성을 근거로 모든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거부할 수는 없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이 미래에 차지할 중요성과 장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과 그로 인한 득과 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2006 바이오안전성백서』: 98).

그렇다면 이러한 외증에서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인식을 형성해 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우리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콩 및 콩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구매 행동은 무엇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가?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소비자들은 언론 보도들을 통해 유전자변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는 반대운동단체나 언론의 보도의 논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유전자 재조합 식품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섭취하겠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1.9%(115명)만이 “절대로 섭취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78.1%)는 “섭취하겠다”(10.6%, 56명), “경우에 따라 섭취하겠다”(56.7%, 298명), 혹은 “잘 모르겠다”(10.8%, 57명)에 답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2000). 보다 최근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행해진 조사에서도 “LMOs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데 반해서 “LMOs를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2006 바이오안전성백서』: 193). 그리고 이러한 구매의사와 관련된 긍정적인 반응은 2003년도 23.1%, 2004년도 32.5%, 2005년도 45.1%로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명과는 별도로 콩의 경우 실제 구매행위에 있어서는 매우 두드러진 GMO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999년의 GMO 두부 파동과 관련하여, 보도가 나간 직후 두부판매가 일시적으로 80% 감소했다는 것 이외에도 “국산 콩”으로 제조된 콩나물이나 두부, 된장, 간장 등의 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30% 정도나 비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제품의 판매가 1일 평균 20~25%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다(News Naver 1999. 11. 9; Korea Times 1999. 11. 11). 또한 2001년 3월 GMO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미국산 식용 콩의 수입이 59%나 감소하였다 하며(연합뉴스 2001. 8. 3), 유전자 변형작물의 위해성 논란 속에서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 7. 10)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콩의 소비에서는 언론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GMO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들이 대부분 위해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콩과 같은 작물의 경우 수입산은 대부분 GMO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만큼 인체에 해로울지도 모르는 GMO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 곧 국산 콩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처럼 민감하게 나타나고 국산제품의 선택이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부, 콩나물 등이 누구나 소비하는 혹은 소비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점과 또한 국산제품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육류와 같은 고가 식품의 경우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더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1) 42세의 기혼 여성(서울 출신, 현 과천시 거주, 대학원 졸)

10여 년 전 시판되는 고춧가루가 믿을 수 없다는 T.V. 보도를 보고 안전한 식품을 구하고자 했으나 시집이나 친정이 모두 서울 출신으로 시골에서 갖다

먹을 수 있는 곳도 없어 생협을 통하여 식품을 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이 있어 본격적인 조합 활동은 하지 못하나 주 1회 생협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식료품도 거의 대부분 생협을 통하여 구입한다. 생협에서는 콩이나 옥수수 등 조작 가능한 것들은 전부 “국산”만 판다. 식용유의 경우도 콩이나 옥수수유가 아니라 생협에서 판매하는 현미유를 사서 먹는다. 생협에서 사지 못할 경우 슈퍼에서 “국산 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 풀무원 같은 데서 나오는 물건들도 국산 콩이 아닌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산 콩”이라고 표시된 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는 전략은 “무농약, 유기농, 국산”을 구입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두 값이 비싸므로 식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수입식품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치즈, 오렌지 등을 사서 먹는다. 육류를 좋아하는데 한우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식품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은 없다. 유전자 조작은 다 미국 것이라지만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접하게 되며, 그런 것들은 표시도 잘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다. 어차피 미국의 대기업과 국내의 대기업이 유착되어 있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선이나 곡물에 대하여는 중국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사례 2〉 61세의 기혼 여성(농촌 출신, 현재 서울 거주, 중학교 졸업)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방송 등에서 많이 보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편이 의심이 많아 수입 식품은 멀리 오면서 변하지 않게 약품처리된 것이 해서 나쁠 것이라고 입에도 안 대려 하므로 주로 시골에 부탁해서 가져다 먹는다. 가져오는 것은 주로 콩, 깨, 고춧가루, 등이며 쌀은 전에는 가져왔으나 지금은 많이 안 먹어 따로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깨는 농촌에서 농사가 안 되어 한국 것이 거의 없다. 값도 국산의 경우 한 되에 2만~3만원 하는데 비해 중국산은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므로, 볶아서 먹는 것만 국산으로 하고, 기름은 중국산을 사서 짜 먹는다. 그러나 꽃게나 갈치 같은 것은 납, 수은등이 들어 있고, 농산물에는 농약, 방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 때리므로 암에 걸릴 가봐 일체 사 먹지 않는다. 맛도 중국산은 크기만 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 금방 알 수 있다. 고기도 수입고기가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아 사도 식구들이 먹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주로 장을 보는 재래시장에는 표시된 것이 잘 없고 유기 농산물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몰라도 변두리 재래시장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단지 농산물의 경우 만 상인이 중국산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안 사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



담이 되기도 하지만 병 걸려 약값, 병원비 들어 갈 생각하면 그 편이 더 경제 적이라 생각 한다

〈사례 3〉 29세의 기혼 여성(지방 도 시출신, 현재 서울 거주, 대학 졸)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변형된 부분은 좋아졌겠지만 부정란이나 환경호르몬 처럼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자연적인 것을 선호한다. 생산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전의 우유/모유 담론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업적 동기에 의해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때도 미국의 분유 회사들이 아기 건강을 위해 반드시 분유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두 유행으로 그것을 좇아 먹었으나 요즘은 모유를 안 먹이거나 못 먹이는 사람은 거의 ‘나쁜 엄마’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음식은 자기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풍토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좋다고 생각한다. 수입 식품은 미국처럼 먼 곳에서 올 경우 설익었을 때 따서 긴 운반과정에서 썩지 않게 항생제, 방부제들을 많이 넣어 가져오므로 몸에 무척 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중국 것이 가져오는 시간이 짧아 더 안전할 수도 있으며, 일본은 건강한 나라, 장수하는 나라고 또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 생각되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은 믿고 산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나라이므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에 더 예속되어 있어 영향력도 크고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오렌지 같은 것은 ‘담배 피듯이’ 계속 사 먹게 되며, 단지 콩나물, 두부 등을 살 때만 국산 콩인가 확인한다. 그 외에 특별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은 저농약, 유기농 같은 것이며 유전자 변형인가 하는 것은 거의 확인 안하고 식용유, 간장 등 2차 가공식품을 살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례 4〉 27세의 독신 남성(성남 출신, 현재 분당 거주, 대학 졸)

Y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생하여 지금은 분당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덴마크에서 일 년 정도 생활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Y씨 자신은 살면서 식품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으나 덴마크에서 살 때는 주위의 젊은이들이 미국 농산물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보았다. 미국산 식품은 닭을 가두어 키우는 등 자연 상태가 아닌 “기계적인 생산, 대량생산”인 경우가 많아 자연 상태에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소비하자는 운동이었다고 기억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며, 건강에 나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직 독신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자신이 독자적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일은 흔치 않으며 어머니를 도와 음식쇼핑을 하는 정도이다. 그는 식품을 구매할 때 유전자변형 식품인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으며 그런 표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일 표시되어 있다면 GM 식품은 사지 않을 것 같다. 잘 모르기는 해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변형된 것은 인공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공이 가해졌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닭고기 생산의 경우처럼 “기계로 키운 것인지도”모르며, 무언가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Y씨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어머니의 경우도 식품을 쇼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가격이다. 즉 유기농산물을 특별히 사 본 적도 없으며, GMO의 경우도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표시 등을 살피지 않는다. Y씨가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자이며, 콩이 유전자 변형식품이 있다는 것은 지금껏 알지 못하였다.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미국서 들어오는 냉동 튀김용 감자 등을 살 때 GMO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며 무심코 사는 경우가 많았다. 소고기의 경우도 수입은 한우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싸니까 사게 된다. 수입육 중에서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 산은 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소고기와 관련해 특별히 광우병의 위험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실 자신은 한우나 수입육이나 맛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막연하게 한우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그 외의 수입식품으로는 오렌지 정도를 먹으며 치즈나 커피 등은 식구 모두가 별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는다.

〈사례 5〉 36세의 주부(경기도 안산시 거주, 전문대 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 안전한 식품에 많은 신경을 쓰는 셈이다. 콩의 경우 유전자 변형된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표시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산콩”을 산다. 국산 콩이라 표시된 것 중에도 한국에서 종자를 중국에 가져다 길러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유전자 변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그나마 믿고 산다. GM콩 제품 이외에도 아이에게 과자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안 먹이고 “집에서 만든 된장, 김치 등 좋은 음식만 주로 먹이려고 노력”한다.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일학년이 재학 중인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올가”라는 공동체를 통해 음식물을 구입하였으나 유기농 과일 등이 너무 비싸고 감당이 안 되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 그만두었다.

본래 본인은 육류를 좋아하지 않으며, 어른이므로 특별히 단백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육류섭취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라는 아이는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주로 국내에서 키운 돼지고기를 사며 소고기는 거의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도 항생제 등을 먹여 키운다고 하지만 전혀 안 먹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입한다. 계란 같은 것은 값이 좀 비싸도 유정란 등 안전하고 좋은 것을 사려고 하지만, 파는 과자나 빵 등에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는 값싼 계란, 우유 등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이에게 안 먹이려 한다.

또한 미국산이건, 중국산이건, 호주산이건 상관없이 수입식품은 가능한 한 피한다. 장거리 운송과정에서 약품처리 등을 했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은 중국산 농산물이라고 다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본토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과일이나 채소나 모두 아주 싱싱하고 좋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방부제 등을 섞을 것이며 그래서 걱정이 되고 피하게 된다.

위의 심층면담 자료들은 음식의 소비에 관한 다양한 고려사항들과 개별적인 선택의 과정을 보여 준다.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식품소비에 나타나는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모순적이며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콩의 소비에서 GMO가 인체에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논의들을 받아들여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산’이나 소위 “우리 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콩이 왜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두부나 콩나물 등 직접적인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일부의 운동가들을 제외하고는 GMO 콩을 원재료로 하는 식용유나 혹은 사료로 쓰이는 GMO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GMO의 안전성이나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GMO를 피하기 위해 개별 가공업자들에 의해 수입되는 중국산 콩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례들은 음식의 소비행위에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형편이나 개인적 기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참조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식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위에 제시된 다섯 개의 사례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성, 경제성, 이념, 국익, 정치적 입장, 국가신뢰도, 가족건강, 편의성, 접근성, 개인 기호 및 정체성 등을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고려하여 식품의 구매행위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지극히 상대적이며 개별 소비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일관적인 경향을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타협된다.

#### 4. 나오는 말

이 글에서는 식품생산유통의 세계화로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중요한 음식이었으며 또한 현대 생활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고 있는 콩이 유전자변형 작물을 개발하여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식품안전성의 문제가 국내에서 쟁점화 되는 과정과 소비자들이 보이는 반응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의 생산 및 가공의 과정이 산업화되고,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은 인간과 음식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종류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식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연결고리들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의 생산, 가공, 유통의 과정으로부터 유리된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전한 식품의 선택을 직접적인 관찰이나 접촉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작물과 같은 식품의 안전성 혹은 위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현대 과학의 성격상 불완전하며 가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허케인즈의

지적에서와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현실’(virtual reality)로서 존재할 뿐이다(Haukanes 2004: 101).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생산이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그에 저항하는 운동단체, 대중언론 등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매개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안전성의 개념은 식품 자체에 내재된 보편적 기준으로 보다는 관련되는 개인, 단체, 국가 등 다양한 단위들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이해관계나 목적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타협된다.

즉 유전자변형 작물의 주된 생산국인 미국의 농민이나 기업들은 유전자변형 작물이 결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반세계화 운동단체들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열등하고 인체에 해로우며, 식량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국내의 언론에서는 재앙, 위험, 국민건강, 환경보호, 식량주권, 국익, 경쟁력, 과학발전 등의 언어를 동원하여 경우에 따라 제한적이고 상반되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대중화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담론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적 안전성의 개념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콩의 소비에 있어 국내의 소비자들은 일부의 제품에서 국산 콩을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식이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적 내지 집단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김광익 1994; Ohnuki-Tierney 1993; Gabaccia 1998), 또한 식품체계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민족적인 순수성과 고유성을 확인하고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이념

적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한도현 2000). 즉 식품의 선택 및 소비행위는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충족이나 영양학적 고려와 같은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으로서의 콩의 성격과 심층면담 자료에서 드러나는 음식소비의 메커니즘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부 제품에서의 뚜렷한 국산 콩 선호 현상은 정치적, 이념적 행위로서 보다는 ‘식품안전성’의 개념 자체가 안고 있는 애매함과 불확실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그것은 “국산”의 선택행위라기 보다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기피행위인 면이 더욱 강하며, 육류 등 기타의 식품과 비교해 콩의 경우 국내산의 선호 현상이 유독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콩의 경우 국내산의 선택이 주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권신한

1985 “大豆의 起源,” 『한국의 콩 연구』 2(1): 4-8.

권영근

2000 “왜 유전자 조작이 문제인가?: GMO에 대한 기초적 이해,” 권영근 편, 『위험한 미래: 유전자 조작 식품이 주는 경고』, 서울: 당대출판.

김광억

1994 “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 총론,” 『한국문화인류학』 26(1): 7-50.

김길환

1984 “콩의 이용과 전망에 대하여,” 『한국의 콩 연구』 1(1): 14-23.

- 김명희 · 김재욱 · 채경연 · 박세원 · 김연순 · 경규향  
 200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지도 및 수용도에 대한 연차별 비교”,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5(6): 1155-1161.
- 김문정 · 김혜선  
 2003 “주부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태도와 구매의사”,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1(2): 19-30.
- 김배성  
 2002 “생명공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조사 분석”, 『농업경제연구』 43(3): 1-31.
- 김은진  
 2004 “GMO에 관한 소비자 수용현황”, 『GMO 바로알기: 활용, 안전성, 정책』 제5차 바이오 안전성 세미나 자료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박민선  
 1999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농업문제”, 『농촌사회』 9: 165-193.  
 2001 “생명공학을 통한 기업의 농업지배”, 『농촌사회』 11(2): 221-241.
- 박민선 · 허남혁  
 2000 “GMO 농작물의 최근동향,” 권영근 편, 2000, 『위험한 미래: 유전자 조작 식품이 주는 경고』, 서울: 당대출판.
- 박희제  
 2004 “농업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 『농촌사회』 14(1): 43-84.
- 배영동  
 2002 “된장을 통해 본 민족음식의 전통과 변화,” 『한국민속학』 35: 51-78.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수입식품검사 통계연보』.
- 와타나베 유지(천춘진 옮김)  
 2000 『유전자 변형식품의 실제: 인간의 도전과 조용한 자연의 경고』. 농민신문사.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편

2000 『유전자조작식품(GMO), 무엇이 문제인가?』.

윤병선

2004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14(1): 7-41.

이경미

2000 “한국 식료시스템의 변화와 농업의 대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25: 151-167.

李敬遠

1984 “구미판 콩쥐 이야기,” 『한국의 콩 연구』 1(1): 29.

李盛雨

1984 “大豆文化는 東方에서,” 『한국의 콩 연구』 1(1): 24-28.

임은정

1999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몰려온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시대』, 1999년 12월호. pp. 45~47면.

장호민

2003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한국의 정책 및 소비자 인식,” 제4차 바이오안전성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영일 · 황수철 편

2000 『식품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농업의 대응』,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정기혜

1998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인식 및 관리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18(1): 103-123.

정기혜

2001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1. 2. pp. 57-66.

조승현

2002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주최, 『종자 및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법 토론회 토론자료집』. 2002년 9월 3일, 서울: 명동성당.

최준호

2001 “시민의 힘이 유전자조작 식품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 『함께  
사는 길』, 2001년 8월호.

한국농업협동조합, 농협조사월보 2000년 7월 24일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6 『2006 바이오안전성백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한국인의 소비실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국 식약품팀 조사보고서.

한도현

2000 “우리농산물 애용운동과 아이덴티티의 정치,” 『사회와 역사』 58:  
235-266.

허남혁

2000 “유전자 조작을 둘러싼 담론: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권영근 편,  
2000, <위험한 미래: 유전자 조작 식품이 주는 경고>, 서울: 당대  
출판.

홍병희

1991 “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Busch, Lawrence

2004 “Grades and Standards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Safe  
Food,” In *The Politics of Food* edited by Lien, M.E. and  
Brigitte Nerlich. Oxford and New York: Berg, pp.163-178.

Gabaccia, Donna R.

1998 *We are What We Eat: Ethnic Food and the Making of  
Americ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uo, Yuhua

- 2004 “Chinese Responses to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e Soybean as Test Case,”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AS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Meetings in San Diego, U.S.A..

Heller, Chaia

- 2004 “Risky Science and Savoire-faire: Peasant Expertise in the French Debate over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 *The Politics of Food* edited by Lien, M. E. and Brigitte Nerlich. Oxford and New York: Berg. 81-100.

Ho, Mae-Wan

- 1998 *Genetic Engineering, Dream or Nightmare? The Brave New World of Bad Science and Big Business*. Bath and Penang: Gateway Books and Third World Network.

Kim, Kwang-ok

- 2004 “Taiwan and the Biotech Revolution: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AS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Meetings in San Diego, U.S.A..

Ohnuki-Tierney, Emiko

- 1993 *Rice as Self: Japanese Identities through Tim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fkin, Jeremy

- 1998 *The Biotech Century: Harnessing the Gene and Remaking the World*. Tarcher/Putnam. [전영택 · 전병기 옮김, 1999, 바|이|오|테 크시대, 서울: 민음사].

Watson, James L.

- 1997 *Golden Arches East: McDonald'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hitelaw, Gavin

- 2004 “Japanese Buyers, Canadian Farmers, and the Moral Economy of Non-Transgenic Soybeans,”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AS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Meetings in San Diego,  
U.S.A.

<인터넷 자료 및 언론보도>

김석동, 1998. “식용콩의 자급화와 기능성 높은 품종개발에 중점.”  
<http://kitel.co.kr/~clicker5/farm/ngi/ng071107.htm>

심현정, 2001. “유전자 조작,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건강”

윤지숙, 2001. “유전자 변형식품 (GMO): 유전자변형식품 도마위 … 위협  
받는 식탁 … GMO 과연 안전한가?” <http://nutrition.tyu.net>

윤지숙, 2002. 2. 19. “수입 GMO 170만톤 추정,” [http://koreaedu.co.kr/학  
부모스쿨/ch141.htm](http://koreaedu.co.kr/학<br/>부모스쿨/ch141.htm)

콩사랑 홈페이지, 2002. <http://www.dubu.co.kr>

콩의 수입과 유통 <http://www.podo.biz>

콩의 종류-콩의 효능 [http://www.kimchimuseum.com/korea\\_food/jang\\_02.htm](http://www.kimchimuseum.com/korea_food/jang_02.htm)  
<http://www.biospectrum.com/soybean.htm>

국제환경뉴스 “미국 GMO 농산물의 세계공략” [http://www.ienews.net/  
dadam/8-gmo.html](http://www.ienews.net/<br/>dadam/8-gmo.html)

Korea Herald, 1999. 7. 6. “U.S. moves against separate labeling of  
GMOs.”

Korea Herald, 1999. 11. 8. “Editorial, Risks of gene altered foods.”

Korea Times, 1999. 11. 11. “Editorial,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News Naver, 2000. 2. 25. “‘GM콩 두부 파문’ 후 국산 콩 제품 판매 급  
증”.

New York Times, 2002. 10. 22. “The Science and Politics of Super  
Rice.”

기타 KINDS 검색 국내일간지 자료

〈Key concepts〉: food safety, GMO, food politics, risk consciousness, food consumption, soybean

## Myth and Reality of “Food Safety”: Korean Responses to Genetically Modified Soybeans

Moon, Okpyo\*

While soybeans have been one of the principal staple foods in Korean traditional diet, its suppl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upon imports from America, a world maj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producer. Yet, in Korea, the response to American- inspired bioengineered foods has been characteristically negative. This paper explor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reasons for this resistanc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GMO soybeans. American farmers do not see their crops as an instrument of foreign policy or as a mechanism for globalization; in their eyes transgenic soybeans are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Korean environmentalists and anti-globalization organizers, on the other hand, have worked hard to demonize transgenic food products as inferior, unhealthy, and counter to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they have successfully publicized these ideas through the mass medi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M soybeans, this paper examines

---

\*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discourses regarding the safety of GMO and their impact upon ordinary consumers. The ultimate purpose of such an analysis is to show that the concept of food safety is not something inherent in the food itself based on universal scientific truth but a relative and ever-changing one constructed as a result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negotiation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